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왜 중요한가

가짜뉴스는 정보기술 활용한 신종 사기... 정보감별사 역량 키워야

구본권 / 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영국 옥스퍼드사전은 2016년을 대표하는 단어로 '탈진실(Post Truth)'을 선정했다. 한국 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정보화 세상에서 사람들의 학력 수준은 어느 때보다 높고, 모든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지적 환경을 누리게 됐다. ©연합뉴스

전 세계가 '가짜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의 2016년 대통령선거,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등에서 허위 왜곡 정보가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잇따르면서 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사전은 2016년을 대표하는 단어로 '탈진실(Post Truth)'을 선정했다. 한국 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정보화 세상

에서 사람들의 학력 수준은 어느 때보다 높고, 모든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지적 환경을 누리게 됐다. 하지만 허위 왜곡 정보로 인한 피해는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역설적인 상황이다. 가짜뉴스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과 기술적 대응도 활발하다. 국회에는 여러 건의 가짜뉴스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고, 국내외 정보기술 기업들은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기술을 동원해 허위 왜곡 정보의 탐지와 확산 방지에 나서고 있다.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 가짜뉴스 확산의 경로가 된 플랫폼은 가짜뉴스를 적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논란 정보'를 표시하는 기술적 시도를 하고 있다. 국내외 언론사들은 팩트체크 조직을 통해 허위 왜곡 정보를 걸러내는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거짓 정보와 사기꾼은 언제나 존재했지만 최근 몇 년처럼 가짜뉴스 현상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인으로까지 확대된 적은 없었다. 현재 추진 중인 규제 법규 마련과 기술적 시도가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하는 방책이 될 수 있을까?

성급하게 답을 해보자면 '절대 불가능'이다. 허위 왜곡 정보로 인한 개인적 피해와 사회적 손실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기술적·법적 대응은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 이는 비판론자만의 우려도 아니다. 2013년 세계경제포럼은 보고서에서 '대량의 허위 디지털 정보가 현대 사회의 주요 리스크의 하나'라고 밝혔다. 미국 컨설팅기업 가트너(Gartner)는 2017년 미래전망보고서를 통해 '2022년이 되면 선진국 시민 대부분은 진짜 정보보다 가짜 정보를 더 많이 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회적 리스크가 된 가짜뉴스

'허위 왜곡 정보는 법과 기술로 막을 수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의 허위 정보 문제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살펴봐야 한다. 허위 왜곡 정보가 발생한 배경에는 미디어 환경과 기술 발달이 있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지배적인 정보전달 매체가 되면서 이용자들의 정보 이용 환경이 매스 미디어 시절과 달라졌다.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에서는 게이트키핑을 거친 매스미디어의 뉴스나 출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구분

없이 유통된다. 소셜미디어의 필터버블, 울림통(echo chamber) 효과는 이념지향성이 비슷한 사람들 간의 정보 유통과 확증편향을 강화한다. 또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진짜와 거의 다름없는 가짜를 만들어내는 수준에 도달했다. 인공지능 신경망(GAN)은 완벽에 가까운 가짜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미 딥페이크 기술은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감쪽같은 유명인 조작 포르노 동영상 등으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기술은 허위 정보를 식별하는 데도 쓰이지만, 이를 만들고 확산하는 용도로도 활용된다. 기술이 허위 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이유다.

가짜뉴스를 법과 규제로 차단하려는 시도도 성공하기 힘들다. 허위 사실을 신봉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고, 이를 통신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수정헌법 제1조로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보장하는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도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12월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에서 허위 정보를 포함한 내용의 통신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또한 2002년 6월 '불온통신 사건' 위헌청구심판에서는 인터넷을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며 '표현촉진적인 매체'라고 밝힘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인터넷에서 더욱 확대되는 것을 인정했다. 이는 가짜뉴스가 대통령 선거나 탄핵 결정 등 정치적 갈등 고조기에 일시적으로 돌출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서 점점 더 지속적으로 강화될 주요한 변화의 방향임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라는 과제도 던져졌다. 인류의 인지적 속성과 능력,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변화와 역사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의 인지능력의 한계와 특성으로 인해 우리는 궁극의 진실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현실 공간은 법과 권력에 따른 합의와 질서의 공간으로, 이는 사실에 대한 공통된 인식과

합의가 가능하다는 신뢰 위에서 작동했다. 갈릴레이(Galileo Galilei) 시절 지동설에 관한 지식처럼 사실은 자명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지식의 발달 그리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 합의로 만들어지고 변화될 수 있다.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이 검열에 반대하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며 내세운 논리는 ‘참이 아닌 것으로 여겨진 소수 의견도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진리로 밝혀질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는 ‘인간은 늘 탈진실의 시대를 살아왔으며 호모사피엔스 특유의 힘은 허구를 만들고 믿는다는 점’이라고 말한다. 하라리는 ‘1,000명의 사람이 조작된 이야기를 한 달간 믿으면 가짜뉴스고, 10억 명이 1,000년 동안 믿으면 종교다’라고 예시한다.

진화하는 ‘정보 사기꾼’

인터넷과 인공지능 환경은 활자와 매스미디어 시대의 리터러시 능력과 다른 차원의 문해력을 요구한다. 디지털 미디어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새로운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다.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세력은 기본적으로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정보의 속성에 대한 기술적 전문성을 갖추고, 지능정보사회의 정보 유통구조와 영향력을 악의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집단이다. 이에 비해 가짜뉴스를 소비하고 영향을 받는 일반 대중은 정보기술과 소셜미디어의 속성에 대해 이해가 낮은 디지털 리터러시 취약층이다. 두 집단 간의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가 가짜뉴스의 확산과 피해의 주된 배경이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개인에게 강력한 권한, 다양한 선택지뿐 아니라 그에 따른 영향과 책임도 함께 부여했다. 과거 여론시장에서 게이트키퍼와 후견인 노릇을 담당했던 매스미디어와 집단의 영향력은 크게 축소되고 있다. 지금은 누구나 매개자 없이 다양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정보를 직접 생산해 유통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는 모든 개인을

언론 발행인과 같은 거대한 권력과 책임의 주체로 변모시켰다.

가짜뉴스는 처음부터 가짜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용자의 신념과 인지체계에 부합하고 부분적 사실과 오류를 뒤섞은 사기성 정보이기 때문에 정체를 식별하기 어렵다. 사기범죄는 사기범을 처벌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거래를 금지하는 것만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사기꾼은 항상 새로운 수법을 갖고 등장하기 마련이고 정보기술을 활용한 신종 사기수법 역시 계속 발달할 것이다.

활자 미디어 시절, 필기에 비해 활자로 인쇄된 글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라는 인식이 형성됐고, 사진 솔이 등장한 이후 현장 사진이 첨부된 기사는 명확한 사실의 증명으로 통용됐다. TV 뉴스가 높은 신뢰를 받은 것은 동영상으로 현장을 생생하게 목도할 수 있다는 미디어적 특성 때문이었다. 워드 프로세서와 프린터가 일상의 도구가 되자, 활자 형태에 주어지던 신뢰는 서서히 사라졌고, 이미지 편집과 조작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이 되면서 사진에 결부된 사실성 또한 열어졌다. 동영상마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지만, 인간의 인지 능력은 디지털 미디어 기술처럼 빠르게 발달하지도 않고 쉽게 변화하지도 않는다.

인류가 수십만 년간 시각과 청각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온 인지적 관성은 본능이 됐으며, 이런 본능은 디지털 허위 정보가 난무하는 오늘날 환경에서도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 무어의 법칙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발달하는 기계의 연산능력과 달리 사람의 인지능력과 주의력은 기본적으로 제한적이다. 사람은 인지적 수고를 최소화하려는 ‘인지적 구두쇠(cognitive miser)’ 성향으로 인해 각종 인지적 오류와 편향을 벗어나기 어렵다. 단기간에 진화하거나 업그레이드되지 않는 인간의 인지능력과 성향은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 비대칭 현상을 만나면서 집단 간, 개인 간의 격차를 증폭시켰다. 악의적 의도를 품은 사람이 인간의 인지 성향에 대한



현법재판소는 2010년 ‘미네르바 사건’에서 허위 정보를 포함한 내용의 통신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결정한 바 있다. 2002년 ‘불온통신 사건’ 위헌청구심판에서는 인터넷을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며 ‘표현촉진적인 매체’라고 밝힘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인터넷에서 더욱 확대되는 것을 인정했다. ©news1

지식을 갖추고 사실과 식별이 어려운 왜곡 정보를 만들어 유포하지만, 다수의 이용자들은 인지적 관성과 편향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짜뉴스의 피해는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커진다. 기술도, 법도 유효한 처방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방법은 무엇일까.

허위 왜곡 정보로 인한 피해가 디지털 미디어의 속성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 유통, 인간의 인지적 편향과 오류 성향, 집단 간 디지털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비롯했다는 사실은 이를 극복하는 방안도 근본적 차원에서 출발해야 함을 알려준다.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포하는 집단에 대해 기술과 법처럼 강제적이고 외부적인 수단이 유효한 대응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미디어에 노출되는 이용자들의 정보 문해력을 강화하는 게 방법이다.

디지털 시티즌십과 미디어 리터러시

현법재판소가 ‘가장 참여적 시장이고 표현촉진적 매체’라고 밝힌 인터넷은 그 강력함과 쌍방향성이 이용자에게 긍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다. 모든 이용자가 매체 발행인 수준의 힘을 갖게 됐다는 것은 그에 걸맞은 책임과 영향도 함께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커다란 힘과 영향력을 가진 도구나 행위는 그로 인한 빛과 그림자 또한 강력하기 때문이다. 강력한 도구의 여러 측면을 함께 인지하고 적절한 활용법을 익히는 게 디지털 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능력이 되지만, 디지털 환경에 대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 사회의 정규 교육은 주로 학교에서 입시를 대비한 교과목의 지식 습득과 평가 위주로 이뤄져

왔다. 실제 사회생활에서는 입시를 대비한 정형적 지식보다 미디어를 통해 만나게 되는 유동적 정보와 지식을 판별하고 읽어내는 능력이 훨씬 중요하다. 한국 청소년들이 PISA 평가에서 매번 수위를 기록 하지만 한국 성인들의 실질 문해력은 OECD 국가 중 하위권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 입시 위주로 진행되고 졸업 이후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식의 유효기간이 단축되고 정보 비대칭 현상이 강화되는 지능정보사회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와 평생학습은 개인과 사회가 갖춰야 할 무엇보다 중요한 능력이다.

그래서 가짜뉴스는 디지털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시민성인 ‘디지털 시티즌십(Digital Citizenship)’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근대 제도교육이 읽기, 쓰기, 셈하기 능력 배양에 초점을 맞춘 것은 이 능력이 산업사회와 시민사회 노동자와 시민에게 요구되는 필수 능력과 자격이었기 때문이다. 지능정보사회로 불리는 디지털 세상은 구성원들에게 산업시대와 다른 종류의 능력을 요구한다. 모두가 정보에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유용한 정보와 왜곡 정보가 뒤섞인 무한한 정보더미가 펼쳐진 현재 상황에서 필히 갖춰야 할 능력이다.

이는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핵심으로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다. 디지털 사회의 필수 생존역량이자 경쟁력이지만, 개인의 책임과 영역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필수불가결한 능력이라는 점은 이를 사회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함을 의미한다. 선진사회는 제도교육 이후에도 평생학습이 활발하게 이뤄진다. 의무교육 이후 성인들의 학습과 교육이 이뤄지는 주된 경로는 일상 속 정보와 오락의 도구인 미디어다. 자유로운 언론과 미디어 활용 능력이 개인과 사회의 핵심적인 지적 역량이라는 사실을 주목한 선진국들은 언론 자유 보장과 함께 시민들의 미디어 교육을 강조해왔다.

“
인터넷의 강력함과 쌍방향성이
이용자에게 긍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다.
모든 이용자가 매체 발행인 수준의 힘을
갖게 됐다는 것은
그에 걸맞은 책임과 영향도 함께
따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미디어 리터러시의 핵심은 정보를 주체적이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비판적 사고력이다. 하지만 이를 기존 제도교육과 평생교육의 틀만으로 접근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 교육을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시민을 교육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다. 시민이 디지털 미디어 이용과 학습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활용 능력을 학습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이는 개인의 미디어 스킬 배양과 학습으로 접근하기보다, 디지털 사회의 새로운 시티즌십과 시민사회 역량 강화 차원에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미디어 이용 주체의 권리와 의무, 역량 학습을 중심으로 한 이용자 단체의 적극적 활동이 요구된다. ♣